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상호 관세) 美 하원 ‘미국 상호무역법안’의 추진 배경 및 세부 내용 1
- 대통령의 무역 협상 및 관세 권한 법제화 취지. 트럼프, 금주 중 상호 관세 조치 공개 예고

🌐 경제통상 동향

- (관세) 트럼프 대통령 철강 관세 25% 부과 포고령(2.10) 주요 내용 4
- (관세) 美,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 자동차·항공 등 제조업 비용 증가 불가피 5
- (전기차) 미국 교통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프로그램 중단 6
- (정책) 美,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추진 7
- (인준) USTR 대표 지명자 그리어, 인준 청문회에서 신정부의 무역·관세 의제 논의 8

🏛️ 의회법안 동향

- 디지털 화폐 제한, 중국 견제 및 중국 화폐 통제 관련 입법 3건 9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10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1

📅 워싱턴 D.C. 주요일정

2.12(수)	• 1월 핵심 소비자물가지수 (Core CPI)
2.13(목)	• 1월 핵심 생산자물가지수 (Core PPI)
2.14(금)	• 1월 소매 판매(U.S. retail sales)

(상호 관세) 美 하원 ‘미국 상호무역법안’의 추진 배경 및 세부 내용

1. 배경

□ 지난 1.24, 미국 하원에 ‘미국 상호무역법안’(US Reciprocal Trade Act) 발의

- 하원 세입위 라일리 무어(Riley M. Moore) 의원이 공화당 의원 8명과 공동 발의
 - 외국의 불평등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발생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의 무역 협상 및 관세 부과 권한을 법제화하려는 목적
- 본 법안은 '19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최초 제안한 바 있으며, 당시 동명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 처리 실패

〈'19년 트럼프 대통령 의회 국정 연설 중 상호무역법안 통과 촉구 발언〉



“오늘 나는 의회에 미국 상호무역법 통과를 요청하고자 한다. 이로써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불평등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도 그 나라가 수출하는 제품에 정확히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Tonight, I am also asking you to pass the 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 so that if another country places an unfair tariff on an American product, we can charge them the exact same tariff on the same product that they sell to us.”

[자료] President Donald J. Trump's State of the Union Address ('19.2.5)

□ 美 정치권 내 국제 무역 관계에서 기계적 형평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 득세

- '24년 대선 당시에 발간됐던 헤리티지재단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 현재 백악관 무역 및 제조 정책 수석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가 무역 분과 저술에 참여해 차기 정부에서 ‘상호무역법’ 처리를 강력히 주장
- '24년 공화당이 채택한 정당 강령(Party Platform)에서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트럼프 상호무역법’ 통과 공약

〈'24년 공화당 정당 강령, 상호무역법 관련 내용 발췌〉



“공화당원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외국산 수입에 대한 보편 기본 관세와 **트럼프 상호무역법 통과를 지지할 것이다**. 관세로 수입품 가격은 오르고, 미국인의 세금 부담은 내려갈 것이다.”

“Republicans will support baseline Tariffs on Foreign-made goods, pass the Trump Reciprocal Trade Act, and respond to unfair Trading practices. As Tariffs on Foreign Producers go up, Taxes on American Workers, Families, and Businesses can come down.”

[자료] THE 2024 REPUBLICAN PLATFORM ('24.7월)

- 백악관은 오는 3.4에 예정된 대통령 국정 연설(State of Union Address)에서 상호무역법 통과를 촉구함으로써 의회 입법 동력 확보 방침

□ 트럼프 대통령, 2.11.~2.12. 중에 직권으로 상호 관세 조치 발표 예고

- 트럼프는 차주 중 외국과 동등한 관세율 수립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발언(2.7.)
 - “상호주의에 따른 동등한 관세율은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다. 일률적으로 (flat fee)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밝힘.
 - 전 세계 대상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보편 관세를 대신해 국별 품목별로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로 추진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 등 해석

2. 미국 상호무역법안 세부 내용

□ (개요) 대통령에게 특정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평가 후 대응 권한을 부여

-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WTO 최혜국 대우(MFN) 제도 불신 팽배
- 교역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도록 협상하거나, 이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대통령 권한 수립

□ (세부 내용) 법안 추진 배경, 대통령 권한, 시행 요건 등 세부 내용 수록

- (배경)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으로서 대체로 개방된 시장과 낮은 관세를 추구해 왔으나, 많은 교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불평등한 관세를 부과 중

- 특히, 유럽의 자동차 시장 보호 정책, 캐나다와 멕시코의 저가 제품 수출 및 불법 이민 문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정책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
⇒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경제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 유발 주장

• **(대통령 권한)**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과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휘할 수 있음.

- (1) 교섭협상 : 해당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 (2) 대응 관세 :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해당국 수입에 적용
- (3) 비관세 장벽 시정 : 상대국이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미국 제품의 수출을 방해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음.

• **(관세 조정)** 대통령은 다음 기준 등을 적용해 특정국 대상 관세율 결정 가능

- 특정 제품의 HS 코드(품목 분류) 및 적용 관세율 비교
-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교역 규모 및 시장 경쟁력
- 해당 국가의 비관세 장벽이 무역을 왜곡하는 수준
- 해당 국가의 조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시행 및 종료)** 대통령이 특정 국가의 조치를 평가하여 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30일 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 준수

-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
* 상하원은 각각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불승인 결의안 통과 가능
- 동 법률에 따라 조정된 관세율은 3년간 유효하고, 필요시 3년 연장 가능

□ **(전망)** 대통령 권한 강화에 의회 견제 기류 존재. 예산 중재 법안 포함 처리 가능성

• 과도한 대통령 관세 권한에 반대하는 의원 다수, 정상적인 입법 전망 불투명

- 다만, 집권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 패키지 법안에 포함되어 처리 가능성 존재.
예산 중재(Budget Reconciliation) 방식 강행 시 공화당 찬성만으로 법안 통과 가능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미국 하원(1.24), 블룸버그(1.10), 폴리τικο 프로(2.7)

(관세) 트럼프 대통령 철강 관세 25% 부과 포고령(2.10) 주요 내용

- (개요) 3.12일부 기존 면제국 포함 전 세계 철강 수입에 관세 25% 적용
 - 기존 무역확대법 232조 관세 조치에서 면제국에 인정됐던 쿼터제 및 대체 조치 (Alternative Arrangement) 종료
 -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및 철강 파생 제품(derivative steel articles) 대상 일률적으로 25% 관세 부과
- (상세) 철강 및 철강 파생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강화
 - 특정 철강 파생 제품(Annex II 포함)에도 25% 관세 적용* 예정이나, 미국 내에서 '제강 (melted and poured)'된 철강을 가공한 제품은 예외
 - * 세부 사항은 연방 관보에 게시 예정
 - 추가 면제는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며, 기존 승인된 제품별 면제(product exclusion)는 유효기간 만료 또는 면제된 수입량이 소진될 때까지만 유지
 - 기존 일반 허가 예외(General Approved Exclusions, GAEs) 조항* 전면 폐지
 - * 미국 내 필수 산업(국방, 자동차, 항공, 반도체 등)에 대체 공급이 어려운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자동으로 적용되던 면제 조항
 - 상무부는 포고령 이후 90일 내 추가 철강 파생 제품 목록을 지정하는 절차 마련
 - 이후 미국 내 철강 또는 철강 파생 제품 생산업체(또는 관련 산업 협회)가 요청할 경우, 접수 후 60일 내 해당 제품의 25% 관세 부과 여부 결정
 -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수입 철강·철강 파생 제품의 분류 심사를 강화하며, 관세 미납 또는 잘못된 분류(misclassification) 적발 시 최대한도의 벌금 부과

- | | |
|-------|---------------------------|
|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정수나 |
| ▪ 자료원 | 백악관 행정명령(2.10), VOA(2.10) |

(관세) 美,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자동차 항공 등 제조업 비용 증가 불가피

- (영향) 관세 조치 대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하류 완제품 모두 포함
 - 미국 내 외국산 철강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항공 우주, 자동차 제조, 에너지 부문에서는 특수 등급의 수입 철강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관련 제조업 비용 증가 전망
 -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발효 후 1년째는 미국 내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산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부문이 침체 경험
 - 이번 조치는 알루미늄 압출재와 슬래브 등 자동차부터 창틀과 고층 빌딩에 이르는 부가가치 제품이 포함되어 트럼프 행정부 1기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
 - 주택건설업자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주택 건설비용을 상승시키고 자연 재해로 부터의 재건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다며 기존 주택비용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 상충되는 조치라고 지적
- (주요국 반응) 보복관세 등 대응논의 착수, 한 달간 시행 시점까지 협상과 병행 전망
 -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성명에서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비례하는 확고한 대응 조치 시사
 - (캐나다) 프랑수아-필리프 상파뉴 과학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철강 및 알루미늄은 방위, 조선, 에너지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핵심 산업을 지원한다”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캐나다에 대한 관세의 정당성 결여 지적
 - (멕시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가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반박
 -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에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분명하다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간 면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추가로 발표될 상호관세 관련 동향 주목

-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 인사이드(2.10), 블룸버그(2.10), FT(2.10)

(전기차) 미국 교통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프로그램 중단

- (개요) 트럼프 행정부, 50억 달러 규모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 중단 지시

- 연방 고속도로 관리청(FHWA)은 각 주에게 국가 전기차 기반 시설(NEVI) 프로그램* 중단 명령 각서 발표(2.6)

* 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은 각 주에 전기차(EV) 충전소를 배치하고, 데이터 수집 및 접근성 촉진을 위한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본 각서는 즉시 효력을 발효, 교통부에서 조만간 새로운 지침을 제공할 때까지 중단 명시

- (상세) 보조금 중단에 따라 각 주는 추가적인 충전소 구축 계획 철회

- 각 주는 교통부에 자금 사용 계획 제출 및 승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약 33억 달러 배정

- 버몬트주 교통청은 NEVI 자금을 통해 70만 달러를 들여 설치한 충전소 1개와 4개의 충전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충전소 구축 중단 발표

- 펜실베이니아주는 이미 승인된 충전소 구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새로운 충전소 건설은 중단될 것이라고 언급

- 로드아일랜드주, 미주리주, 앨라배마주, 오클라호마주 등은 해당 각서 발표 이전에 전기차 충전기 프로그램 일시 중단 확인

- 전기차 데이터 기업인 Paren에 따르면 지금까지 충전소는 55개만 설치, 각 주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충전소 건설 진행이 지연될 것으로 분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경현
▪ 자료원	WP(2.7), 교통부(링크)

(정책) 美,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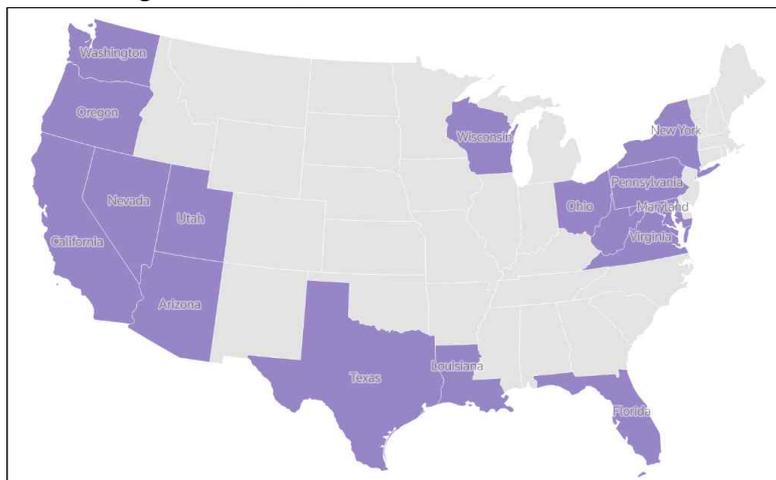
• (개요) 트럼프 행정부, AI 정책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개시

-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3일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 행정명령(EO 14179)'에 서명하며, 정부 개입 최소화과 민간 주도의 혁신을 핵심 기조로 한 'AI 액션 플랜' 수립 공식화
- 이를 위해, 美 과학기술정책국은 학계, 산업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AI 정책의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 개시(2.6~ 3.15)
- * 의견 논의 대상: △AI 모델 개발 및 오픈소스 활성화, △사이버 보안 강화, △공공 부문 AI 도입, △AI 모델 검증 체계 구축, △AI 모델 개발 및 오픈소스 활성화 등

• (상세) 미국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 시사

-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윤리성, 보안, 공정성, 글로벌 협력 중심의 AI 정책과 달리, 독자적 기술 주도권 확보와 시장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정책 기조 제시
- 특히, OpenAI, SoftBank, Oracle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Stargate' 컨소시엄을 출범해,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추진
- * 텍사스주가 AI 인프라 확충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으로, 추가 주(州)들이 후보지로 거론

< Stargate 프로젝트 데이터센터 구축 후보 주 >



[자료] 로이터통신(2.6)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연방관보(2.6), 로이터통신(2.6), 워싱턴포스트(1.21)

(인준) USTR 대표 지명자 그리어, 인준 청문회에서 신정부의 무역·관세 의제 논의

- (개요) 美 상원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 지명자 인준 청문회 진행
 - USTR 대표 인준 상원 청문회(2.6)에서 그리어*는 미 제조업 재건 및 공급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무역 정책 추진을 표명하고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기조 강조
 - * 트럼프 1기 행정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비서실장 역임, 대중 관세 조치 및 USMCA 협정 설계에 참여
 - (상세) 그리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접근 방식에 따른 무역 및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USTR 대표 인준 시 실질적 무역 정책 추진 노력 시사
 - (무역) △무역 정책·협상·규제 강화로 국제무역 시스템의 재편 주장, △농산물 시장 확대를 통한 보복 관세 영향 완화, △USMCA 원산지 규정 조정, △무역 적자 축소 및 불공정 무역 해소를 위해 미국과의 무역 흑자국과 "호혜적" 무역 협정 협상 우선 언급 △디지털 무역* 규제 강화를 통한 미국 기업 보호, 특히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유지의 중요성 강조
 -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 옹호, △보편 관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 언급, △전략적 관세 부과를 통한 미 기업, 산업 및 공급망 강화 의지 표명,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 핫라인 설치 및 관세 면제 절차의 투명성 확보 약속
 - (기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미준수 부문 재검토, △반도체·AI·양자 컴퓨팅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 확보 등 강조
- ※ 2.11(화)일 인준 표결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일시 추후 공고 예정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로이터통신(2.6), 뉴욕타임스(2.5)

미국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디지털 화폐 (CBDC) 제한 (2.6)	S.464 (상) (2.6)	Mike Lee (공)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법 (No CBDC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준비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CBDC)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연방법 개정
중국 견제 (2.7)	H.R.1122 (하) (2.7)	Mark Green (공)	<중국 기술이전 통제법 (China Technology Transfer Control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특정 기술 및 지재권의 중국(PRC) 수출통제 법안 중국군의 민감한 미국 기술 및 지재권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조치 시행 지시
중국 화폐 통제 (2.10)	H.R.386 (하) (25.1.13)	Warren Davidson (공)	<2025년 중국 통화 책임법 (Chinese Currency Accountability Act of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서 위안화 비중 확대에 반대하도록 IMF 미국 대표 이사에게 지시 하원 통과
	H.R.692 (하) (25.1.23)	Daniel Meuser (공)	<2023년 중국 환율 투명성 법 (China Exchange Rate Transparency Act of 20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PRC)의 환율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IMF 내 영향력 행사 추진 하원 통과

* 미국 동부 시간 2월 11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Trump's Conflicting Business Policies Sow Economic Uncertainty (트럼프의 상충되는 경제 정책에 고개 드는 경제적 불확실성)</p> <p>기업들은 신 행정부의 화석연료 확대, 감세, 규제 폐지에 환호했으나 관세 정책, 이민자 추방, 연방예산 감축에는 혼란. 기업가들은 현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 저해를 초래할 것을 우려</p>
The Washington Post	<p>U.S.-China trade war hits small and midsize businesses especially hard (미중 무역갈등, 중소기업에 특히 큰 타격으로)</p> <p>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탈중국을 선택할 여력이 거의 없어. 최근 발표된 트럼프 관세로 중소기업들은 가격 상승 압박을 감내할지, 소비자에 전가할지 생존을 건 선택 중</p>
The New York Times	<p>Ford Chief Executive Says Trump Policies May Lead to Layoffs (포드 최고경영자, 트럼프 정책이 정리해고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p> <p>포드 CEO 짐 팔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자동차 산업 정책이 비용 증가로 이어져 완성차 업체들이 감원을 선택할 수 있다 발언. 포드사는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를 위해 막대한 비용 투자</p>
CNN	<p>Key takeaways from Fed Chair Jerome Powell's congressional hearing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주요 발언록)</p> <p>파월 의장은 단기간내 기준금리를 낮출 계획이 없다고 밝혀. 자유무역과 관련해서는 2018년처럼 자유무역을 긍정하나 특정 거대국가가 규칙을 어기면 잘 작동할 수 없다고 발언.</p>
USA Today	<p>Gaza ceasefire in peril after Netanyahu threatens to kill deal over fate of hostages (흔들리는 가자 휴전 협정... 네타냐후, 인질 석방 여부로 지속여부 위협)</p> <p>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인질들을 토요일 정오까지 석방하지 않으면 다시 이스라엘군을 다시 투입할 것을 밝혀.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의 협정 이행을 요청하며 인질 석방을 중단</p>

* 미국 동부 시간 2월 11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03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2월
US25-02	2025년 글로벌 경제·통상 정책 전환과 주요 일정	2025.02월
US25-01	美 신정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대통령 조치 분석 및 시사점	2025.01월
US24-47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글로벌 무역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	2024.12월
US24-46	미 2050 원자력 3배 확대 로드맵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4.12월
US24-45	美 상무부 반도체 장비·고대역폭메모리 수출통제 조치 주요 내용	2024.12월
US24-44	트럼프 2기 정부의 전기차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 영향 전망	2024.12월
US24-43	현지 언론이 평가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과 향후 전망	2024.12월
US24-42	미·중 경제안보 심의위원회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2024.12월
US24-41	118대 미국 의회 레임덕 세션에서 다뤄질 주요 정책·법안 전망	2024.11월
US24-40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관세 추진 동향 및 주요국 대응 전략	2024.11월
US24-39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 소매업계 영향 전망	2024.11월
US24-38	미국 반도체법 첨단 패키징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 동향	2024.10월
US24-37	미 경제연구소,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주장	2024.10월
US24-36	美 동부 항만 파업 동향 및 현지 반응	2024.10월
US24-35	美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수입 금지 조치 주요 내용	2024.09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0 (2024.12.23.)		
코인사-19 (2024.12.23.)		

문의	이메일	전화
	seogil.chang@kotra.or.kr jwshim@kotra.or.kr	+1) 202-857-7919